

기업·노조 참여 최대한 늘리고 정부 뒷받침 끌어내야

밈그림 나온 '광주형 일자리'... 풀어야 할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협약이 20일 마련되면서 운영현 광주시장의 민선 6기 최대 핵심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정부 지원과 함께 전국 확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기초협약 체결에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데다, 새 정부의 올해 일자리 추경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은 3억원의 연구 용역비 밖에 책정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지적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마련=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기본이 될 기초협약이 이날 마련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민선 6기 최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초 협약이라는 성과를 내기까지 3년여 시간이 걸렸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의 원칙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적정임금(연대임금) 실현이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상(제2장 2조)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및 일·하청 관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정 근로시간 실현도 협약에 포함됐다. 1인당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긴 노동 상황을 개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 노동과 삶의 바람직한 공존을 지향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보자는 것이다.

원정기업과 하청기업 간 고질적인 불평등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등

성공까지 난제 수두룩

새정부 일자리 모델 불구

11조 추경에 고작 3억 책정

원칙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질서를 전환하자는 내용의 원·하청 관계 개혁도 협약에 포함됐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실현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책임있는 노동,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중시하는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노사 책임경영의 구현과 확대도 4가지 기초협약에 포함됐다.

◇풀어야 할 과제=기초협약 체결에는 한국노총 등 일부 지역 노동계가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기초협약의 핵심과제인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 경영 구현 등은 예만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기업체 노사의 합의까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노동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반값 임금 모델'이며, 한국의 노사문화 속에서 쉽게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체 노사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여전히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일부 노동계를 설득,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초협약을 기반으로 민간거버넌스 구성 등의 활



방미 앞둔 文대통령 美CBS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을 통해 기업과 노조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광주시의 정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일자리 정책 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민간거버넌스 구성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해 정부 지원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예산 3억원도 광주시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닌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성격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극 지원 및 전국 확산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에도 그치면서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원익기자 cki@kwangju.co.kr

文대통령 '안팎 파고' 어떻게 넘을까

인사 논란에 추경 편성 등 뼈적

곳곳 약재 한미정상회담 걱정

첫 평일 일정 없이 해법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첫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크고 작은 인사 잡음에 휘말리며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의 신뢰 구축에도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20일로 출범 42일째를 맞았지만, 연착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평일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돌파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초기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각 구성이 시급한데 현재까지 임명된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 9명의 장관이 국회 인

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3곳은 인선조차 못하고 있다.

또 야권이 인사 문제와 연계 전략을 구사하면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의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은 장관 인선과 추경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은 강경한 편이다.

아울러 9일 앞으로 다가온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도 걱정이다. 한미 정상 모두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외교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호흡을 맞추기 위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지만 약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측에서 불신 분위기를 띄우며 정상회담 기선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공개 발언을 미국과 일부 국내 보수 진영에서 미국과의 잇박자로 인식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도원씨의 사망은 새로운 약재가 됐다. 미국 정부를 자극, 대화를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 토론회 '기승전-일자리' 대책 발굴·확대 방안·실국협업 논의

전남도가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에 발맞춰 도 차원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 도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열어 각 실국별 일자리 대책을 공유하고, 보완·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각 실국은 ▲기업 현장의 일자리 확대 방안 ▲농업기술 분야 일자리 100일 플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위한 실국 간 협업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일자

리 정책실은 일자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지역 단위 일자리위원회 구성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경제과학국은 내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역 산업 개편, 전남 청년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국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했으며 농업기술 분야 세부 사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담은 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남형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국제자동차 경주장 슈퍼카 유치,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등 실·국별 주요사업에도 일자리

와 결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토론회에서 "고용 현황이 전국적으로 좋지 않고, 전남 역시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0.4%p 떨어지고, 실업률은 0.6%p 올랐다"며 "모든 실국이 '내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못 찾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공공 일자리와 함께 민간부문의 일자리 만들기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혁신도시 공공기업 등

의 고용 현황 및 채용 예정 등의 일정을 살피고,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또 "서민시책과 일자리 대책을 계속 발굴해 이번 정부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2018년 사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또 최근 가뭄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이번 정부 추경의 국회 논의 과정서 항구적 가뭄대책비가 반영되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과제를 발굴해 건의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제품(이전) 보증금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제품(이후) 보증금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4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